

# 광주, 김장철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

### 민간업체 업종 변경·공공시설 보수 겹쳐 하루 140t 처리 못해 12월 최대 고비... 시설 증설·신설 등 근본대책 마련 시급

광주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민간 업체가 업종을 변경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80%를 처리하는 공공음식물 처리시설 2곳이 각각 6~10일간 시설을 멈추고 정비하는 10월, 11월과 김장철인 12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년 거르지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설 증설 또는 신설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72t에 이르는데, 공공시설 2곳에서 462t, 민간시설 3곳에서 110t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은 공공1시설인 송대자원화 시설이 150t, 공공2시설인 유덕자원화 시설이 300t, 민간시설인 ㈜성주환경(광주), 그린에코바이오(화순), ㈜정북바이오(담양)가 나머지 150t을 맡고 있다.

그런데 민간처리시설 중 하나인 정북바이오가 업종을 바꾸면서 26일부터 업무를 종료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수분 제거 등 1차 처리된 고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비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한 뒤에 내년 11월 이후 담양군의 자원 재활용 회수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북은 광주지역 대형 음식점과 100인 이상 급식소 등 530여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약 35t을 처리했다. 광주시는 정북의 물량 35t을 다른 민간업체에 나눠 처리하

는 방안과 다른 지역의 업체에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광주 일부 학교와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갑자기 폐업한 것도 부담이다. 이 업체는 광주에서 나오는 음식물 10여t을 수거해 영암지역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영암 처리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맞으면서 아예 광주 수거업체가 아예 폐업을 한 것이다.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로 한 곳이 사라진 셈이다.

무엇보다 공공처리시설인 2개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각각 10월과 11월에 하반기 정기보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포화상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송대자원화시설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하루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유덕자원화시설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각각 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

처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송대자원화시설 보수 기간에는 처리용량 150t 가운데 60t을 공공시설에서, 90t을 민간시설에서 분산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덕자원화시설 보수 기간에는 전체 처리용량 300t 가운데 공공시설 40t, 민간시설 120t을 분산처리하더라도 남은 140t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광주시는 일부 시민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격일 수거나 자연 수거, 공공시설 처리용량 증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일평균 최대 20% 증가하는 12월 김장철도 대란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시민들께서도 가정과 식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직전'

### 저장률 90%... 한빛원전 70%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저장률은 90.2%로 '포화 직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원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총 저장용량은 52만8716다발인데 이미 사용후핵연료 47만6729다발이 저장된 상태다.

6월 기준 경우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1만8789다발(저장률 70.1%) 저장됐고, 중수로에서는 45만7940다발(91.2%)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 보면 고리 3호기의 저장률이 94.2%, 고리 4호기 94.9%, 한울 1호기 90.8% 등이었다.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저장률 70.6%를 보였으나 이마저도 예초 설계했던 저장량보다 더 보관할 수 있

도록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으로 인류가 발생한 최악의 오염물질로 평가받는다. 모든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약 10만년이 걸릴 정도로 치명적이다. 영구 처분장(보관장)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인류가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사회 갈등 때문에 원전 시설에 수십년간 임시 저장하는 형편이다.

신원현 의원은 "외부반출이 어려운 사용후핵연료 관리 여건을 고려해 하루속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0년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를 어떤 정권도 책임지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제점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여수~완도 해역 적조특보 39일만에 해제

### 전남도, 10월까지 정기예찰

여수~완도 해역 적조특보가 발령 39일만인 지난 27일 오전 11시 전연 해제됐다. 전남도는 그러나 오는 10월까지 정기예찰을 할 계획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적조로 양식어류 24만3000마리가 폐사해 4억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여수, 고흥, 장흥, 완도해역에서 고밀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특히 예천과 다르게 8월 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9월 초 수온 하강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제13호 태풍 '링링' 이후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이 여수해역

에 유입됐다. 이어 적조생물이 성장하기에 알맞은 수온과 일조량이 지속되자 적조가 급격히 확산돼 9월 말까지 적조특보 발령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초기 적조상황실을 운영하다 적조경보로 격상된 9월 10일 적조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또 경보 발령 해역의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고, 적조방제 현장에서 여수시, 여수해경, 어류양식수협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돌산대교 아래의 해상가조리를 신월항 인근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20칸, 8만 마리)하고 민, 관, 경 합동으로 적조경보 상황에 총력 대응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우울증 신약 개발 본격 추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우울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추진할 연구 과제는 '세로토닌 수용체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복합 기전의 우울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개발'이다.

참여기업인 (주)나츄럴엔도텍과 공동으로 국내 자생 생약자원을 이용해 비임상시험 및 국내 1, 2상 임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확보를 계획한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자생 천연자원의 항우울제 의약품 원료 활용 가능성을 타진,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연구에 나섰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의 천연물신약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최철용 천연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병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증의 특성상, 단일기전 치료제보다는 복합기전의 치료제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폭염·한파 취약 계층 15만명

### 전국 112만명... 복지사업에 냉방비 지원 추가 검토해야

폭염·한파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 시·도민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1만878명, 전남 13만8289명

이 폭염·한파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다. 온열 질환자는 올해 광주 43명(사망 1명), 전남 198명(사망 2명)이다. 한랭 질환자도 지난해 기준 광주 7명, 전남 27명(사망 3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112만1996명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됐으며 서울(20만4188명),

경북(15만300명), 전남(13만8289명) 순이었다.

올해 1841명(사망 11명)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404명(사망 10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50대(22.1%), 40대(16%), 60대(15.4%) 순으로 외부 활동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40~60대가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3

배가 많았다.

최근 5년 사이 두가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62명에 달했으며 온열 질환자가 한랭 질환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됐다.

인재근 의원은 "온열 질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폭염 대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냉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개막식 10. 1.(화) 18:00 장성공설운동장

#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2019

10. 1.(화) ~ 10. 13.(일) 장성군 황룡강 일원

황룡강의 10억 송이 아름다운 꽃은 10.20.(일)까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장성축령산 편백산소속제

10.5.(토) 축령산 숲속쉼터

앵무새특별체험관 9.24. OPEN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